PROJECT MUSE®

:
= Transgradient

Problematics of ‘ Cultural Studies ’ and Their Actuality

Jin Seok Choi

Trans-Humanities Journal, Volume 8, Number 2, June 2015, pp. 67-100
(Article)

Published by University of Hawai'i Press

DOI: <https://doi.org/10.1353/trh.2015.0018>

➔ *For additional information about this article*

<https://muse.jhu.edu/article/635444/summary>

문화연구의 탈경계적 문제설정과 그 현재성: 제도와 탈제도의 정치적 계보학

최진석 (이화여자대학교)

I. 들어가며: 근대의 학문제도와 문화연구

근대 학문은 대학 제도와 평행적인 역사적 궤적을 그리며 성립했다. 중세 이래 신학과 법학을 중심으로 발달했던 대학은 르네상스에 이르러 문법과 수사학, 역사학, 시, 도덕철학 등을 포함하기 시작했고, 이러한 제도적 울타리에 귀속된 영역들에 ‘학문’의 자격을 부여했던 까닭이다(크리스텔러 40-53). 오늘날의 ‘인문학’에 해당하는 이러한 분과들은 대학의 제도적 경계 ‘바깥’에서는 생존하기 어려웠기에 제도의 지속적인 지원 속에서 성장했고, 제도 ‘안’의 학문적 장치이자 제도 자체와 등가적 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기초’ 학문이자 ‘근본’ 학문으로서 인문학이 내세우는 자의식과 존재감은 이로부터 연원한다.

르네상스기의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studia humanitatis)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것이 명확히 한정된 경계를 지닌 분과성을 띠는 점이었다. 그것은 수학과 천문학, 의학, 법학, 신학 및 논리학 등 중세부터 전승되던 영역들을 의식적으로 제외함으로써 자신의 ‘새로움’(근대성)을 분명히 각인하고자 했고, 이 점에서 문·사·철을 두루 아우르려는 근대 인문학과 달랐다. 체제상 근대 대학은 이러한 르네상스 분과학을 지향함으로써 학문의 자립성과 전문성을 추구하고자 했다. 통념과 달리, 칸트가 학

문의 자율성을 이념적으로 승인한 후에 근대의 분과학문들이 성립한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이미 분과적 자족성이 나타났고, 칸트는 이를 다만 학문의 언어로서 정식화했다고 할 수 있다. 마치 경제체제의 역사에서 분업이 그랬듯, 학문에서도 분과화는 근대성의 주요한 면모로 나타나게 된다. “모든 것을 포괄한다”는 인문학의 외양은 실상 비좁게 할양된 영토에 ‘안주’하거나 ‘사육’된 근대 학문의 환상일지도 모른다.¹

‘제도화’로 표면되는 학문의 국가적 귀속은 분과화된 근대 학문의 운명을 예시한다. 대학의 학과별 분류체계는 근대 국가의 중앙집권화 및 관료사회와 상관적으로 발전했고, 이는 ‘정보’로 환원되는 지식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성장과 무관하지 않다. 인류학과 제국주의, 사회학과 관료제, 경영학과 회사-사회, 인문학과 국민화가 늘 결부되어 거론되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당연히 이런 경향은 학문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학문에 대한 제도의 통제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근대 학문이 주기적으로 ‘위기’에 봉착했던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흥미로운 점은 위기에 대처하는 학문의 대응책 중 하나가 새로운 경계설정, 즉 학문적 경계의 변환을 통해 새로운 분과를 창립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이다. 가령 최초의 위기라 할 만한 19세기 후반의 실증주의 논쟁은 정신과학과 문화과학을 태동시켰고, 다시 맑스주의 연구와 정신분석의 태동, 사회과학의 전환을 촉발했다.² 제도의 위기가 제도의 탈경계화를 통해 해소되었던 것이다.

지식의 경계를 재설정함으로써 연구의 대상과 개념적 착안점, 방법론에 변화가 생겨나고 그것이 새로운 연구의 창달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
1. 휴머니즘의 이름으로 군림해온 인문학은 역설적으로 ‘인간’이라는 감옥에 갇힌 수인의 몽상이며, 19세기에 그 역사가 시작된 ‘최근의’ 경향에 불과하다(푸코 525-26).
 2. 이때 맑스주의 연구는 19세기의 사회운동에서 학문적 체계로의 이동을 가리키며, 사회과학의 전환은 막스 베버(Max Weber)와 다비드 에밀 뒤르켐(David Émile Durkheim)에 의해 심성연구가 추가된 부분을 뜻한다(휴 17-48).
-

탈경계화가 지식장 전반을 동요시켜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틀을 구성하지 못하는 한, 그것은 단순한 경계선 이동, 곧 지식의 또 다른 재경계화와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일종의 위약효과로서 일시적으로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보급, 유통을 지원할지 몰라도, 근본적으로는 동일한 장을 유지·수호하는 보수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³ 이때 위기는 제도 외부에서 투입해 들어와 제도를 내파하는 힘이 아니라 내부에서 생산되고 순환되는 일종의 조절 메커니즘적 성격을 갖는다. 제도의 ‘안’에서 순환하는 위기는 결코 제도를 넘어설 수 없으며, 결국 제도의 재생산을 위해 복무할 뿐이다. 영화 〈설국열차〉(봉준호, 2013)에서 과잉인구를 조절하기 위한 메커니즘으로서 반란이 주기적으로 조장되듯, 근대 학문에 있어서 ‘위기의 제도화’는 오히려 학문이 위기를 벗어날 잠재력을 소진시켜 왔다.

문화연구의 문제설정은 이렇게 제도와 맞물려 순환하는 위기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것인가에서 비롯되었다. 소위 탈근대, 혹은 포스트모던과 동시대의 궤적 속에서 출범한 문화연구는 다양한 분과학문들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며 등장했고, 현대사회의 제반 문제들에 대해 ‘개입’을 목표로 등장했다. 이 점에서 문화연구는 탈경계화를 본원적인 문제의식이자 주제 및 방법론으로 삼지 않을 수 없었다. 고도 소비사회에서 유통하는 대중의 욕망을 파악하고, 계급구조의 변동과 그로 인해 야기된 정체성의 변화를 인지하며, 정치경제학의 현대적 외양으로서 문화적 외관과 사회혁명의 동학을 연구하는 것은 근대적 분과학문의 경계 내에서는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와 같은 탈경계적 문제설정이 제도 내의 재경계화로 회수되는 것은 아닌지, 제도 ‘너머’로 나아가는 진정한 탈경계의 궤적을 그릴

3. 영문학의 성립사에서 근대 문학의 제도화가 실은 19세기 종교(성공회)의 위기를 타개하려는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 전략이었다는 지적은 이에 관한 명확한 사례를 제공한다. 셰익스피어로 상징되는 국민문학으로서의 영문학은 신앙이 더 이상 국민통합의 힘을 갖지 못하는 세속사회에서 새로운 정서적 통합 축을 만들어 내려는 근대적 기획(국민-국가)의 일환이었다(이글턴 27-71).

수 있을 것인지에 달려 있다.

1960년대에 문화연구가 하나의 '학문'으로서 성립한 이래 문화연구의 대의와 방법론은 서구와 한국의 현실에서 수차례 소환되어 왔다. 화석화된 사회과학을 되살리기 위한 '보조제'로서, 인문학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지원군'으로서 문화연구는 호출되었고, 그때마다 적절히 '처방'되었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연구는 항상 위기와 함께 했던 영역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듯하다. 더구나 애초부터 본질적인 자기 정체성을 주장하지 않던 문화연구는 기성 분과들의 위기에 호출되는 과정에서 그것들과 일정 정도 혼성화의 과정을 겪었다. 그 결과, 지금 인문·사회과학의 상당한 영역들은 문화연구의 관점과 주제, 방법론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현재적 시점에서 문화연구란 무엇인가, 그 본래적 문제설정은 얼마만큼의 효과를 거두었나를 물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잠정적인 답안은 부정적이다. 분과학문의 위기는 아직 계속되고 있으며, 문화연구 역시 그 자체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진단을 우리는 자주 마주치는 탓이다. 후자만을 일단 관점화한다면, '학문'의 레테르를 달고 대학과 '공존'하는 상황에서 문화연구 또한 제도의 포로가 되었다는 의혹은 마냥 풍문만이 아니다(이상길, 「문화연구의 연구문화」 6-7). 2014년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이 타계하면서 '역사적 문화연구'가 종언을 고했다는 현재의 시점에서, 문화연구는 제도와 그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고 있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은 비단 '문화연구'라는 레테르(letter)를 명시적으로 붙이고 있는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 글은 상기의 물음들에 대한 모범답안을 제시하려는 시도가 아니다. 차라리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차후에 내려질 답안들에 대한 시안을 구상해보고자 한다. 그것은 문화연구의 성립사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제도화와 위기의 문제, 문화연구에서 탈경계화란 어떤 것인지 검토해 보는 일이다. 이로써 우리가 찾는 것은 문화연구란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주의적 정의가 아니라, (역사적) 문화연구가 종언을 맞은 지금 문화연구란 어

편 것이어야 하는지에 관한 정세적인 진단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푸코적 의미에서 계보학적 문제설정이며, 방법에 대한 탐구이지 않을 수 없다.⁴ 일종의 진단시험지로서 이 글을 사용하기 위하여 먼저 서구 문화연구의 발생과 전개에 대해 논의한 다음, 한국에서 그것의 도입과 변형, 현황에 대해 살펴본 후, 결론에서 진단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II. 서구의 문화연구: 제도의 위기와 제도화의 질곡

문화연구는 대항담론의 형태로 태어나서 성장했다. 이 말은 그것이 역사적 정세 속에 선행하는 제도의 위기와 항상 연동되어 작동했다는 뜻이다(McRobbie 719). 가령 19세기 종교의 위기에 대응하여 영문학이 제도로서 발흥하였고, 다시 그 세기 말에 이르러 문학이 위기에 봉착하면서 좌파 문화주의가 탄생했다(브랜틀링거 67-121). 이는 다시 1960년대에 위기를 맞게 되고, 홀 등이 현대문화센터를 성립함으로써 전환점을 마련한다. 하나의 학제로서 문화연구는 1980년대에 호주와 미국으로 전파되었고, 1990년대에는 일본과 한국 등 동아시아로도 확산돼 또 한 번의 변용되었다. 재미있는 사실은, 문화연구는 그것의 현실적 전개와 세계적 확대의 역사 속에서 유사한 양상을 반복해 왔다는 점이다. 물론, 각각의 국면들은 서로 유사하면서도 상이했지만, 제도와와의 관계에 있어서 비슷한 실패를 겪어왔다고 할 수 있다. 서구 문화연구의 역사를 통해 이를 확인해 보자.

4. 본문 전체를 통해 ‘경계’란 외적·공간적 영역성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것은 (비)가시적인 권력의 영토화와 그 효과가 나타나고, 저항의 중층적 지대들이 표지되는 위상학적 공간을 뜻한다. ‘탈경계’라는 의미심장한 열쇠어는 미하일 바흐친(Mikhail Bakhtin)과 미셸 푸코(Michel Foucault), 질 들뢰즈(Gilles Deleuze)·펠릭스 가타리(Félix Guattari) 등에 게서 착안한 것이다.

1. 현대문화연구소, '내재하는 외부'의 동학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히 발전한 대중문화는 자본주의적 상품생산 제도에 뿌리를 내린 것이고, 대중문화 텍스트 역시 이러한 상품관계에 토대를 둔 것이었다(이스트롭 93). 하지만 전통적 좌파는 대중문화를 자본주의에 오염된 통속적인 퇴폐문화로 천시하기 일쑤였고, 사회 변혁적 투쟁의 본질적 장소는 토대 자체, 즉 경제적 생산관계에 있다는 믿음을 고수했다. 그들에게 자본주의 사회의 철폐는 문화의 오염과 통속화를 자연스럽고 신속하게 해결할 정치적 우선과제로 여겨졌다.

그러나 1950년 이래 서구사회는 자본주의의 최고 호황기를 이어가고 있었고 상품경제는 더욱 확대일로에 진입하던 중이었다. 이에 따라 소비주의가 자본주의 사회의 중요한 문화적 경향으로 자리 잡는다. 영화와 라디오, 서적출판이나 쇼핑 같은 대중적 소비산업이 급속히 팽창했고, 고용률과 급여수준의 안정적 상승으로 노동계급은 문화적·경제적 변화의 주된 향유자가 되었다. 영국의 경우 보수당이 전후의 번영을 이어가겠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상승세를 탄 반면, 노동당은 1950년대에 있었던 세 번의 총선에서 전패하고 전통적 지지층으로부터 유리되었다(프록터 42-44). 더구나 1956년에 벌어진 소련의 헝가리 무력진압과 영국의 수에즈 운하 침공은 동서진영 모두가 근대 국가적 이데올로기의 구현체에 불과함을 강하게 심어준 사건들이었다(김용규 51-52). '혁명'으로 대변되는 진정한 해방의 과제를 당시의 지배적 체제를 통해서서는 이룰 수 없다는 게 확실해 보였다.

자메이카 출신의 스튜어트 홀은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과 재학시절 찰스 테일러, 페리 및 베네딕트 앤더슨 형제, 레이먼드 윌리엄스 등과 함께 사회주의자 그룹을 결성하고 이렇게 변화된 정세에 주목하였다(임영호 254-56). 교조적 맑스주의의 계급중심주의와 경제결정론으로는 대중도 문화도 변혁하기는커녕 이해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을 직감한 그는 대중문화와 정

치의 분리를 주장했던 전통적 좌파와 결별하고, 대중문화 속의 정치학을 구상한다. 그것은 문화는 단연코 정치의 문제이지만, 동시에 문화를 정치학으로 환원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 문화의 정치학을 새로이 구성해야 한다는 테제에 기반한 것이었다. 이른바 영국의 신좌파, 또는 문화연구가 발원한 지점이 여기다. 그럼 홀을 중심으로 한 영국 문화연구의 성립 조건에 대해 살펴보자.

영국 공산당의 교조주의에 처음부터 반기를 들었던 신좌파는 정통 맑스주의의 문제틀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근거기반을 만들어 갔다. 톰슨 등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공산당 탈당파와 젊은 대학원생 지식인들이 주축이 되어 창간된 『뉴 레프트 리뷰』(*New Left Review*)가 이 새로운 흐름의 기관지였는데, 그들은 경험주의적 전통에 간혀있던 사회연구의 틀을 이론 중심적 방향으로 전환시키고 대륙 맑스주의의 관점들을 수입해 번역·소개하기 시작했다. 나중에 홀의 방법론을 특징짓는 루이 피에르 알튀세르(Louis Pierre Althusser)와 안토니오 그람시(Antonio Gramsci)의 사상도 이런 통로를 통해 확보된 것이다. 특히 홀은 대중문화에 대해 정통 맑스주의가 보였던 경직된 태도에 거부감을 표시하고 20세기의 변화된 상황에서는 더 이상 물질적 조건에 의해 선결정된 계급적대가 가능하지 않다고 선언했다.

1958년에 홀이 발표한 논문 「계급소멸의 의미」(*A Sense of Classlessness*)는 실제로 계급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니라 가시적으로 명백히 분리되는 계급양극화의 사태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적시한 것이다. 오히려 양극화와 같은 극단적인 19세기적 테제는 현대 자본주의의 동학을 냉정히 분석하는 데 방해만 될 뿐이며, 문화가 지닌 계급해방과 혁명의 본질적 역할을 은폐시키는데 일조할 따름이다. 오히려 문화는 사회구성의 핵심적 계기로 부상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중핵담론으로 제기되기에 이른다(Hall, "The 'First' New Left" 25-26).⁵ 문화를

5. 정치나 경제가 아니라 문화를 사회의 건설적 기초로 표명한 것은 당시 소련과 유럽좌파의

자본주의 분석의 대상으로 인지하고 문화 속에서 대중의 주체화가 이루어짐을 직시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사회는 백일몽에 불과할 것이다. 문화는 자본주의의 지배방식만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잠재적 저항의 장소'이기 때문이다(프록터 50).

1963년 버밍엄 대학교(University of Birmingham)에 창설된 현대문화연구소(Center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는 이러한 테제를 명시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통화하기 위해 창설된 기관이었다. 문화에 관한 최초이자 새로운 연구형태로서 문화연구가 제도적인 승인을 획득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전래의 문학이나 사회학, 역사학 등 전통적 학제와의 차별성을 처음부터 강조했는데, 왜냐면 “문화연구는 새로운 분과학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화연구는 “넓은 분과학문을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결합하여 응용하는 동시에 비판하고 개조할 수 있는 ‘장’(site) 또는 주제이고자 했다(브랜틀링거 113). 자기 정합적이고 일관된 통일적 이론이 없다는 점은 현대문화연구소의 강점이자 약점이 된다. 강점은 외부의 다양한 이론적 전거들을 자유롭게 끌어다 쓸 수 있었기 때문이고, 약점은 중심성 없이 요동치는 이론적 유행에 끌려 다닐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후자는 나중에 문화연구에 있어서 내적 위기, 곧 패러다임들 사이의 갈등이란 주제로 줄곧 문제화되었다(하윤금 11-33).

외적 견지에서 볼 때 현대문화연구소의 창설과 스튜어트 홀의 활약은 대중문화의 전면화와 소비주의의 약진이라는 자본주의 사회의 환경적 요인에 대한 대응적 측면이 컸다. 하지만 보다 내밀하게 성립조건을 살펴본다면, 그것은 영문학이나 사회학 등 기성 연구체계가 더 이상 현행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제도 자체의 위기에서 연원한 탓도 크다. 즉 문화

공식 노선과는 어긋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동서 양진영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전후 경제적 호황에 힘입어 대중문화가 급속히 발달한 서구는 말할 것도 없이, 스탈린 사후 소련과 동구권에서도 서구와의 일정한 교감을 통해 대중문화가 활발히 발달하고 있었다(벽-모스 125-67).

연구가 등장 요인에는 후기 자본주의의 사회적 위기와 더불어 기성 학문 체계의 위기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었다. 인문학과 사회과학 전반의 분과적 경계들이 담보하지 못하는 현대 사회와 문화의 영역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었고, 그것을 진단하고 분석할 방법의 위기가 그것이다. 탈경계라는 문화연구의 본원적 문제설정은 여기에서 연유했고, 따라서 탈제도화는 문화연구의 본질적인 관심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대학의 학제로서 오랜 시간 고유한 이론과 방법론을 갖추고 있던 기성 학문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만의 인식론과 체계를 갖지 않은 채 ‘자유롭게’ 이론과 방법론을 차용해서 사용하고자 했던 문화연구의 입장이 ‘곱게’ 보일 수 없었다. 외부에서 끌어들인 이론과 방법론에 입각하고, 그에 대한 자기 비판적 수행성을 학문적 준거로 삼아야 했던 문화연구가 전래의 분과학문들에 대한 적대적 관계 속에서 정치적 입장을 처음부터 내세워야 했던 까닭이 여기에 있다. 정체성의 정치학이나 이데올로기 비판이라는 문화연구의 주요 문제설정이 궁극적으로 문화연구 자체의 영도성을 형성하는 이론이자 방법론적 무기가 되어야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의 사정에서다 (브랜틀링거 114).⁶

근대 학문이 설정했던 제도적 관계나 연구형태로부터의 이탈을 중시했기에 문화연구의 진폭은 다양하고도 새로운 것이었으나, 실제로 제도와 완전히 명맥을 끊고 자립적인 연구 집단을 유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현대문화연구소를 버밍엄 대학과 연계하여 설립한 이유에는 이러한 현실적 난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을까? 더구나 온전히 자기의 것이라 자신할 수 없는 이론체계나 방법론이 부재할 때 연구조직이나 학파를 유지할 수 있는 토양은 제도화에 있다고 믿지는 않았을까? 문화연구가 제도와 맺는 미묘하고도 복잡한 관계는 그 출발점에서부터 배태되었다. 여기엔 ‘연구’

6. 같은 입장에서 홀은 맑스주의조차 이데올로기 분석의 절대적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역설했다(홀, 「이데올로기의 문제」 59).

의 현실적 조건에 기인한 바 크겠지만, 반드시 불가피했기에 채택한 조건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홀과 그의 동료들이 구좌파적 전략을 거부하고 문화를 전략적 거점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은 그들의 전선이 체제 '외부'에 그어졌기 보다는 일종의 '내재하는 외부'로서 형성되었음을 반증하기 때문이다.

2. 문화연구의 제도화와 그 위기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사이에 영국의 문화연구는 세계적 차원에서 학제적 위상을 획득하게 되었다. 남북 아메리카와 호주, 아시아 등지에서 주요한 학문체계로 수출되어 제도화되었던 것이다. 이때 데이비드 몰리(David Morley), 존 피스크(John Fiske), 로렌스 그로스버그(Lawrence Grossberg) 등의 신진 연구자들도 나타나 문화 분석의 이론적·방법론적 기틀도 확장되었다. 이론적으로는 기호학과 서사학, 정신분석, 페미니즘, 미디어테크놀로지 등이 가세해 방법론적 풍요로움을 더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세계화 현상의 저변에는 홀이 '뉴 타임즈'라 불렀던 포스트-포드주의(Post-Fordism)적 국면의 등장, 글로벌 자본주의의 무제한적 확장 및 신자유주의 체제의 전면화 등으로 인해 문화연구가 기존의 정치경제학을 대신하여 세계자본주의 연구의 중심과제로 널리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자극한 영향도 있다.

이처럼 문화연구의 화려한 개선 이면으로, 문화연구의 제도적 확대와 심화가 그것이 본래 노정했던 정치화와 급진성을 점차 탈색시키고 있었다는 사실은 문제였다(이상길, 「문화연구의 아포리아」 85-86). 문화적 담론의 텍스트 분석이나 하위문화 연구, 언론학이 주축이 된 미디어 연구, 또는 인류학과 결합한 민족지적 현장연구 등 문화연구의 대상과 방법론이 신장된 것은 나쁘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애초에 근대적 분과학문에 종속되길 거부하며 성립된 문화연구가 다종다양한 대상선정과 이론화, 방법론을 갖추게 되면서 역으로 그 자체로 분과 학문적 성향을 띠게 된 것은 아이러니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분과적 영역을 개척하여 적극적으로 개발하게 되

면서 오히려 초기의 비판정신은 퇴조하는 결과가 빚어진 것이다. 달리 말해, 특수 영역에 대한 고유한 지도 그리기가 완수되면 될수록 그것은 해당 영역을 특권화하고 이질적인 접근이나 판단을 배제하는 분과적 제도화로 굳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문화연구의 발전사를 크게 조망해 볼 때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위기가 출현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초기에 홀 자신이 문화연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이라 명명했던 구조주의와 문화주의의 대립이 그러했고(홀, 「두 가지 패러다임」 221), 푸코의 영향 아래 문화연구자 자신의 분석적 위치가 저항적이기보다는 권력 친화적이고 정당화의 논법에 인입됨으로써 지배질서에 봉사하는 아이러니가 발견된 경우도 그러했다(초우 33-36). 담론분석에 집중하다보니 정치경제학적 분석을 멀리하게 되거나(Maxwell 2-3), 특수 영역에 대한 연구방법론이 정교하고 복잡해질수록 정치성이 탈각되는 데 따른 우려도 자주 제기되었다(그로스버그 127-28). 이 경우들은 제도화에 저항하는 문화연구 자체의 본래적인 자기 비판적 수행성과 정치화(급진화)를 통해 쇄신의 가능성을 발견해가는 과정이기도 했다. 내재하는 외부로서, 체제의 안에서 기능하면서 동시에 외부를 향한 내파(implosion)가 작동하게 만드는 전략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문화연구의 진정한 위기는 재정과 연구의 기반조성 등 여러 현실적 조건 때문에 의존하였던 제도적 장치들로 인해 유발된다.

1990년대 초 영국과 미국에서 문화연구가 고유한 학과체제로 분화되고 전문화되자, 문화연구는 자연스럽게 제도의 정규적 체제처럼 인식되고 작동하기 시작했다. 비록 스튜어트 홀이 근대 학문의 관례였던 '기원'의 신화를 거부하였고(Hall, "Cultural Studies" 277-78; 프록터 81), 정전으로서의 개인 저작출판에 무관심했음에도 불구하고(임영호 267-68), 제도화는 문화연구가 피해갈 수 없는 심각한 자기비판의 문제로서 제기되었던 것이다.

그 극명한 사례는 현대문화연구소 자체의 역사에서 잘 드러난다. 설립 초부터 대학부설 연구소로서 재정을 포함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아왔던

현대문화연구소는 1980년대 후반부터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시작했고, 1990년대 중반에는 문화연구학과로 재편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학 내 제도가 되었다. 제도사의 관점에서 볼 때 학과의 창설은 신흥 학문이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성공사례로 기록될 법한 일일 것이다. 그것은 문화연구가 제도 속에 안착했음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지표이자 이미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던 문화연구의 중추적 거점이 마련된 사건이기도 했다. 동시에 이는 연구소가 아카데미 내에서의 실적평가와 그 여부에 따라 재정지원의 증대 혹은 삭감으로 인한 전적인 의존상태에 빠져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짐작할 만한 반전이 문화연구의 역사에 기록되고 말았다. 2002년 버밍엄 대학교가 연구업적평가(Research Assessment Exercise)의 부실을 사유로 문화연구학과와 후신이었던 문화사회학과를 폐지하면서 해당 교수진을 해고해 버리고 만 것이다(임영호 270).

영국 대학 내의 한 학과의 폐지를 문화연구 전체의 거대한 위기로 부풀릴 필요는 없겠지만, 창설지에서 벌어진 이 사태는 실로 상징적 의미 그 이상을 갖는다. 폐지 자체가 아니라 폐지에 이르게 된 경위, 즉 하나의 학문적 입장으로서는 문화연구를 성립시키기 위해 취해야 했던 제도화의 굴레를 끝내 벗어나지 못한 사례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것은 국지적이고 개별적인 하나의 실패담으로서 연계되는 다음 문제의식을 촉발시키고, 대응전략을 짜게 만들기에 그 자체로 하나의 유의미한 교훈을 제공하는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제도에 저항하기 위해, 제도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 역설적으로 제도의 경계에 걸쳐진 채 출범했던 문화연구의 실험적 시도가 강화되는 신자유주의적 사회현실에서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다.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 한국의 문화연구 역시 엇비슷한 맥락의 실험과 위기의 구조를 반복함으로써 우리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던지게 된다.

Ⅲ. 한국의 문화연구: 사회운동과 문화적 현실의 동학

한국에 문화연구와 같은 ‘최신’ 경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겨우 1990년대에 접어들며 가능했다. 1987년의 민주화가 도달하기까지 한국에서 문화란 부르주아적 퇴폐주의와 거의 동의어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사회적 변혁을 추구하는 혁명적 투쟁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형식적 민주주의가 달성되고 해방운동의 가시적 목표가 불투명해지면서 투쟁의 무대가 바뀌었다. 1990년대에 접어들며 자본과 노동 사이에 그어졌던 전선이 문화의 이름으로 전위된 것이다. 게다가 1992년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는 1980년대를 풍미하던 좌파 맑스주의적 운동에도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 노동운동으로 대변되던 종래의 투쟁방식이 대중적 호소력을 상실한 가운데 사회운동과 사회분석도 새로운 방향타를 찾기에 골몰했다.

소위 87년 체제의 출범과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 등으로 변화된 정치사회적 지형이 부정적이기만 했던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군부독재에 의해 오랫동안 폐쇄되었던 한국의 현실에서 역시 오래도록 경직된 채 머물러야 했던 진보적 운동들도 변화를 맞이했는데, 이는 실상 1960년대 이후 서구 좌파운동이 걸었던 길을 뒤늦게 반복하는 것이었다(라클라우 & 무페 7-26). 특히 신좌파 운동과 결부된 해방투쟁의 다양화는 교조화된 한국의 운동현실에 심대한 영향을 끼쳐 해체와 재결집, 진로전환을 부추겼다. 이는 더구나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화된 신자유주의와 충돌하면서 더욱 복합적인 차원으로 전개되는데, 문화연구는 그러한 흐름의 한 가닥으로 등장했고, 이전의 흐름들과 절합적 관계 속에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

1. 맑스주의의 위기와 문화연구로의 전환

현실 변혁운동의 총체적 위기는 맑스주의의 위기와 맞물려 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위기는 민주화라는 가시적 목표가 달성되자마자 터져 나왔는데, 형식적이지만 권위주의로부터 민주주의로의 체제전환이 이루어

지자 1980년대를 지배하던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라는 문제가 순식간에 해소된 듯 한 가상이 펼쳐진 것이다. 물론 민주화 이후에도 여전히 노사대립이 첨예하게 불거져 나왔고, 과거 군부세력에 대한 법적 처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기득권의 지배질서가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그것은 하나의 경계선 다시 굿기, 재정계화를 함축하는 사태였다. 하지만 대중은 더 이상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감각하고 행동하지 않았다.⁷ 해외여행 자유화와 외국 문화 개방 등으로 세계에 대한 인식의 폭이 갑자기 넓어졌으며, 영화와 음악을 위시한 취향에 대한 대중의 욕망이 전례 없이 폭발해 나왔다. 바야흐로 문화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⁸

공산주의 블록의 해체와 국내 운동권의 해산을 경험한 지식인·활동가들이 현장을 이탈하거나 직접적으로 정치에 뛰어드는 한편으로, 현상 질서의 변화를 자본주의 지배의 전략적 변형으로 간주하여 투쟁의 방식을 그에 맞게 변형해보려는 경향도 생겨났다. 유럽의 신좌파가 1960년대 이후의 사회질서를 자본주의의 고도화된 지배전략으로 간주하여 문화적 장에서 투쟁을 계속했듯, 90년대 한국의 지식인들도 문화적 장에서 노동과 자본의 계급투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간주했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문화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를 내세운 『이론』이나 『문화과학』이 1992년에 창간되어 활동을 시작한다. 80년대 사회과학이 문화연구의 영역으로 이동한 시점이었다.

문화운동의 깃발을 선취했던 두 잡지의 동인들은 교조적이던 맑스주의 이론의 한계를 넘어서 문화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방법의 지평을 열고자

-
7. 1987년 이후 투표율의 지속적 하락은 정치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열정이 급격히 식었음을 반증한다. 13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율은 각각 89.2%와 75.8%였는데, 20년 후에는 각각 62.9%와 46.0%로 추락해 버려서 거의 30%의 유권자들이 투표권 행사를 포기했음을 알 수 있다(최장집 20).
8. 87년 이후 한국 문화상황의 변동은 ① 80년대식 민중문화 담론의 쇠퇴와 탈정치화 ② 문화 시장 개방과 독점자본의 문화지배 ③ 신세대 문화의 등장 ④ 쾌락주의와 소비주의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김창남 175-92).
-

했다. 그들에게 문화란 계급투쟁에 쫓겨난 당의정 같은 것으로 현상의 본질을 은폐하거나 왜곡 또는 굴절시켜 착란을 일으키게 만드는 정교한 인지적 구조물이었다.⁹ 두 잡지 모두 변화된 사회지형에서 대중의 욕망을 읽어내고 그것이 펼쳐진 문화의 장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했다.¹⁰ 보다 이론 지향적이고 사회과학적 문맥이 강했던 『이론』이 1997년 통권 17호를 끝으로 폐간된 반면, 『문화과학』은 중간에 제명을 약간 고친 상태로 현재까지 유지되는 형편이다. 현실과 이론의 관계설정, 변혁운동에서 문화의 위상과 기능 및 가능성에 더 큰 관심을 가졌던 『문화과학』의 적응력이 더 컸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이 자리에 그에 대한 판단은 미뤄두고, 일단 한국의 문화연구가 부딪친 제도화와 그 위기, 탈경제화라는 우리의 논점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자.

강내회에 따르면 『문화과학』 창간의 직접적인 이유는 이렇다. 1991년 5월 25일 노태우 정권퇴진 및 공안통치 종식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성균관대 대학생 김귀정이 경찰에 의해 사망하자 전국적인 소요가 일어났지만 별다른 반향을 남기지 못한 채 소진되었다. 이는 당시 운동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는데, 전술했듯이 87년 이후 대중의 관심이 정치적 개입에서 문화의 향유라는 측면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운동이 예전과 같은 직접적인 호응을 얻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따라서 문화(대중의 욕망)를 직접 연구하지 않고는 운동도, 혁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서 잡지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전환’의 맥락은 더 구체적이고 분석적으로 파고 들어야 한다. 사회과학에서 문화연구로의 이동은 1980년대 말에서 90년대에 접어들며 한국사회가 현격하게 내비친 구조변동을 반영하는데, 그것은 한국이 고도화된 소비자본주의 단계에 접

9. “우리가 ‘문화과학’의 이름으로 진보의 기획에 동참하는 것은 문화가 전에 없이 중요한 계급투쟁의 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문화과학』 편집위원 2).

10. 두 잡지의 동인구성이나 이론적 구도는 거의 엇비슷했는데, 참여자들의 면면이 상당 부분 겹쳐있었고 양자 모두 알튀세르주의에서 출발했기 때문이다(강내회, 「인터뷰」 166-67).

어 들었으며 자본주의의 축적전략에서 문화의 역할이 현격히 높아졌음을 인식한데서 비롯한 것이다. 이런 이론적 판단은 방법론의 각성과 변형도 추동하여, 90년대 문화연구의 주요 의제들을 80년대의 이념적 지향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정하게 강제했다. “문화는 일상적이다”라는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테제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대중의 일상경험에 착목하는 한편, 자본주의 사회를 기저에서부터 지배하는 문화산업을 해부하면서도 동시대의 비주류 문화들, 가령 하위문화 등을 적극 독해함으로써 대안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문화연구, 즉 새로운 문화정치학의 목표가 된다(이동연, 『문화연구의』 21-34).

흥미로운 점은 『문화/과학』이 호를 거듭하면서 그때그때마다 문화연구가 당면한 현실과 그 요구에 맞춰 연구의 의제를 발전적으로 변이시켜 나갔다는 사실이다. 가령 알튀세르의 호명논리에 입각해 문화의 이데올로기적 동학을 분석의 초점으로 삼았던 창간호의 의제가 은연중에 80년대식 이념적 의제를 연상시켰다면, 이후 잡지의 주제들은 ‘언어’(2호), ‘육망’(3호), ‘육체’(4호), ‘공간’(5호), ‘사이버’(10호), ‘문화공학’(14호) 등으로 옮겨가 대중적 삶의 실감을 포착하고 거기서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는 단초를 모색하는 데로 나아갔다. 큰 틀에서 이 경향은 ‘유물론적 문화이론’이라는 창간의제를 확대발전시키는 것이었으나, 문화연구가 직면한 현상의 변화에 기민하게 적응하여 새롭게 의제화하고 그것을 이론화하여 적용가능성을 타진하는 적극성과 능동성에서 기인한 것이다. 단순히 경계선을 다시 긋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중의 감각에 ‘자연스럽게’ 수용된 감각의 분할지대를 탈선시켜 새롭게 재구축함으로써 현실의 ‘악한 고리’가 폭발하도록 점화시키는 게 목적이었다. 홀의 현대문화연구소가 그러했듯, 현실에 깊숙이 삼투하여 역으로 내과의 선을 발견하는 전략이 그것이다. 실제로 『문화과학』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개입적 의제들을 제안하였는데, ‘문화공학’과 ‘문화사회론,’ ‘생태문화 코뮌주의,’ ‘사회미학’ 등의 복합연관적 계열을 그 목록에 넣어볼 수 있다.¹¹

대략적으로 정리한다면, 『문화/과학』은 문화연구 내부의 이론적 장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제기된 실천적 문제들로부터 생겨난 위기를 꾸준히 돌파하면서 진화해 왔다. 이론과 실천 사이에 그어졌던 학문적 경계를 넘나들며 절합의 전술을 구사함으로써 새로운 논쟁의 지대를 열었던 것이다. 이로써 1980년대 이후 공전하던 이론적 논의를 문화적 장에서 계속할 수 있게 되었고, 대중적 현실을 이론의 언어로 번역하여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진보를 표방하며 집권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다수의 문화학자와 연구자가 국가의 문화정책 과정에 다각적으로 개입하여 연구와 현장을 연결시키려 했던 사실은 특기할 만하다(이동연, 「문화/과학의」 152-58). 비록 『문화/과학』이 이론과잉이나 자기정당화의 낙관주의에 빠져있다는 비판이 없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넘게 명맥을 잇는 대표적인 문화연구지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탈경계화의 지향에 있는 듯하다.

그 부정적 측면들도 분명하다. 『문화/과학』의 동인 가운데 참여정부 당시 다양한 방식으로 정책형성에 참여한 이들이 적지 않으나, 2000년대 후반에 보수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완전히 역전된 사태를 맞이해야 했다. 문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접속구가 변경되면서 제도 밖에서 입안된 정책들은 허무하게 무산될 수밖에 없었고, 이전에 수립되고 집행되었던 정책안들 역시 무위로 돌아가며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했던 까닭이다. 현실 문화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입가능성이 중요함에도 제도(국가)와 지나치게 결착될 때, 역으로 그 제도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복불복’처럼 좌지우지될 소지가 다분하며, 이는 문화에 대한 정책론적 개입이 위기를 타개하는 적

11. 창간 20주년 기념호에 실린 다음 두 편의 논문들이 이 의제들의 필연성과 의의, 실현가능성 및 실제 진행과정 등을 상세히 다루고 있기에, 우리의 논의에서 더 다루지는 않겠다. Cf. 심광현, 「『문화/과학』 20년의 이론적 궤적에 대한 비판적 회고: 개혁과 혁명의 변증법적 리듬 분석을 중심으로」, 『문화/과학』 70 (2012): 17-147; 「『문화/과학』의 이론적 실천과 문화운동의 궤적들」, 『문화/과학』 70 (2012): 148-79.

절한 방도를 늘 제시하는 것은 아니란 점을 적시해 준다(이동연, 『문화/과학의』 158-59).

제도에 대한 의존을 삼가야 한다는 반대편으로 제도와와의 완전한 절연을 주장하는 것 역시 문제일 수 있다. 제도와 일절 타협하지 않은 채 불요불굴의 정신으로 ‘반(反)제도’의 기치를 내세우는 것은 ‘탈경계’와 ‘제도 너머’라는 문화연구 본연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미학적 낭만주의에 함몰될 위험을 품게 되기 때문이다. 문화연구 지향의 개인과 그룹들이 사실상 제도와는 무관히 연구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취와 실패와는 별개로 자족적인 인공현실에 간헐 현실개입의 끈을 상실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확히 그 사례는 아니지만, 『문화/과학』도 현실에 대한 다양한 개입전략을 취하는 가운데 실질적이기보다 낙관적인 미학에 가까운 입장을 보였던 게 사실이다.¹² 또한 문화연구나 인문학을 표방한 제도 바깥의 개인과 단체들이 ‘비제도의 제도화’로 정향되는 경우도 심심찮게 발견되어 왔다. 문화연구의 본령을 현실사회에 대한 정치 분석과 실천적 개입, 탈경계화를 통한 현재 위기의 돌파에서 찾는 데 두는 것은 적절할지 모르나,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명명의 권리를 확보하려는 태도는 자기 고립적인 무리수가 될 것이다. 그것은 ‘제도 너머의 제도화’를 초래하는 것이며, 그로써 현재 발생하는 위기에 대응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할 것이다.

12. 이는 사회미학적 태제의 중핵이 “비인간적 착취의 현장에 미적 감수성으로 맞서는 것은 어떤 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요한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이동연, 『문화/과학의』 174). 이 진술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만한 것이지만, ‘미적 감수성’이라는 주체의 의지와 감응에 큰 방점을 찍음으로써 사회경제적 차원을 간과할 수도 있다는 의구심이 든다. 이는 ‘경제의 심미화’라 부를 만한데, 그것은 신자유주의 체제 내의 자본주의가 본질적으로 심미적인 것을 이윤 수취의 주요 방식으로 채택하고 그것을 심화·확대하는 것임을 간과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 오판일 수 있는 것이다(서동진 10-41).

2. 인문학의 위기와 문화사 및 문화론적 연구

한국 문화연구의 전사(前史)를 돌아볼 때 ‘인문학의 위기’를 반드시 거론하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제도화와 위기 사이의 기묘한 변전과 반전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 위기의 실제 양상은 어떤 것이었는가?

우선 그것은 인문학이라는 전통적 지식담론이 부딪힌 위기로서 1960년대 서구사회에 불어 닥친 포스트모더니즘이 민주화 이후 한국의 지식사회로 전이되며 벌어진 현상이었다. 리오타르에 따르면, 포스트모던 시대의 지식은 생산과 유통, 소비의 전 형식에서 이전과는 판연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과거에 지식은 수목적이고 위계적으로 체계를 짓고 도제적 공동체인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연마되었으나, 이제 그것은 수평적이고 혼성적인 방식으로 조합된다(리오타르). 따라서 새로운 지식은 전래의 지식이 갖던 형태 및 권위의 구조를 상실하고 다른 방식으로 재구조화될 필요에 처하는데, 이 현상은 전통적 학문의 관점에서 ‘위기’라 불리게 된다. 왜냐하면 ‘모던’한 학문의 경계를 다른 방식으로 재경계화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이래 신자유주의적 사회변동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나타난 인문학의 위기는 다름 아닌 대학 제도의 위기였다(이성훈 114). 문·사·철로 대표되는 전통적 인문학 분과에서 신입생 수가 격감하고, 이에 따라 교수 정원 및 대학원생 수도 축소될 형편에 놓이자 인문학을 살려야 한다는 호소가 대학 안팎으로 확대된 것이다. 당연한 말이지만, 인문학의 ‘인기하락’이 물질만능 풍조나 사람들의 경박해진 인식 탓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 위기는 전통의 논리와 방법론에 고착된 인문학 자체의 폐쇄주의 및 대학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으로 유발된 구조조정에서 기인한 바가 컸다. 어느 모로 보나 90년대 인문학의 위기는 제도 속의 학문이 시대변화에 따른 제도의 위기에 적합한 대응책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

었다. 인문학이 전통적 탐구영역을 벗어나 문화로 모색의 지대를 넓힌 것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일종의 생존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다(강내희, 「문화연구와」 1-3).¹³ 우리는 이러한 회생전략의 양상들을 대학 안팎, 국가 제도 자체에서 확인하고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

위기에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대응했던 집단은 대학제도 외부의 자발적 연구단체들이었다. 2000년을 전후해 생겨난 비제도권 연구단체들은 대학 사회와는 차별화된 인문학 연구를 선언하고 일반대중과 접촉하였는데, 1980년대 이래 학교 밖 인문학을 지향하던 문예아카데미 등을 비롯하여, 철학아카데미, 연구 공간 수유+너머 등이 이에 동참하였고 실제로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 연구단체는 제도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생적인 인문학 연구를 추구하였으며, 대중강연과 출판사업 등을 통해 인문학이 전문적 지식인집단의 울타리를 벗어나 사회일반으로 확대·보급되는데 중요한 저변을 마련했다고 평가된다(김원 112-15). 이 흐름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서, 제도의 힘을 빌지 않았음에도 이전보다 더욱 전문화되고 탄탄한 조직을 갖춘 인문학 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요컨대 제도의 경계를 넘어서기를 시도해 제도의 위기를 벗어나는 전략을 꾀한 셈이다.

인문학 위기의 진원지로 지목되었던 대학의 대응전략 역시 주의를 요한다. 상황조건과 무관히 전통적 관점과 방법론을 고수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비제도 인문학 운동과 연결되면서 대학 또한 자발적인 전환의 길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였다. 이는 관점에 있어 통섭(consilience)과 융합(convergence, fusion)을 기조로 한 인식의 전환을, 방식에 있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다양한 방법론을 인문학적으로 전유하는 것을 뜻한

13. 이때 고유명사로서 문화연구는 전통적 인문학과 어느 정도 대립적이다. 후자가 인간의 가치와 존엄이라는 휴머니즘적 전통에서 있는 반면, 알튀세르적 관점을 채택해 발전한 문화연구는 이론적 반인간주의를 취하는데다가 전자를 기존 지식생산형태로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¹⁴ 19세기 이래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과 구별되는 고유의 영역을 개척·확보하는 데 전력했던 인문학은, 이제 위기를 맞아 인근 영역들을 자신의 자원으로 받아들이고 인문학 자체의 재구조화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대학은 이 과정을 주도하고 개발하기 위한 유리한 거점이 되었는데, 타학문과의 소통 및 결합이라는 과제는 풍부한 인력풀과 탄탄한 연구기반환경, 안정적인 재정조건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한 걸음 나아가 대학 외부의 인문학이 대중 참여적 형태로 위기를 타개해 나가는 데 자극된 대학 인문학은 일반 대중에게도 문호를 열어 인문학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명분과 소득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 경우를 우리는 제도의 재정개혁, 곧 제도 내적 개혁을 통한 위기의 해소라 할 수 있다.

국가·사회적 단위에서 인문학을 진흥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일어났다. 가령 국가는 각 지역단체별로 도서관과 문화센터에 예산을 지원해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게 했고, 사회적으로는 시민단체와 기업 이 후원하여 인문학 강의가 열렸다. 이러한 인문학은 시민들의 다양한 지적 관심을 충족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누구나 일상 속에서 인문학과 접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를 거두었다. 특히, 제도적 자격증(학위)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해 시민들과 접촉점을 마련함으로써 인문학에 대한 일반의 거부감이나 이질감을 해소시켰으며, 저소득·저학력의 서민들과 고소득·고학력 시민들을 두루 포괄하는 다양한 강좌를 도입했다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시민인문학은 곧잘 ‘백화점 인문학’으로 변질되기도 하는 바, 지적 소양의 증대나 삶에 대한 안목의 전환 등의 취지와는 무관한 전시용 행사에 그치는 사례들이 자주 보고되고 있다. 국가의 공적자본이나 기업자본 등으로 지원되는 인문학 사업이 역으로 인문학을 질식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이 있었던 것이다. 이는 제도가 초래한 위기를 다시 제

14. 에드워드 윌슨(Edward Wilson) 등이 제창한 ‘통섭’의 논리가 이러한 학제 간 교차가능성에 힘을 실어주었으나, 인문학 고유의 논리를 무시하고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학문을 재통합하려는 시도란 점에서 비판을 면치 못했다.

도를 통해 해소시키는 제도 자체의 경계 짓기에 해당된다.¹⁵

반복하건대 인문학의 위기라는 ‘반복적’ 현상은 근대적 학문이 봉착한 제도의 위기와 상관적이다. 현재의 시점에서 깊이 있게 고찰해야 할 것은 제도의 위기를 제도 내적 차원에서 혹은 제도 자체의 부력에 의해 해소할 수 있는냐는 질문이다. 달리 말해, 위기의 해소를 국가·사회적 제도에 위임할 수 있는가? 앞서 언급했듯, 정책주의적 해결책은 그 정책주체로서 국가가 과연 진보적인가, 대중민주주의에 얼마나 의지를 갖고 있는가, 탈자본주의적 공동체 구성방안으로서 사회적 연대를 고취하는가, 그럼으로써 문화를 현상문제의 은폐물(‘당의정’)로 삼거나 착취의 재구조화를 위해 심미화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질문들에 선결적으로 답할 때나 가능한 일이다.¹⁶ 그렇지 않다면 문화에 대한 관심은 현재의 지배적 구조에 의해 편의적으로 재정계화되어 또 다른 착취의 도식에 포획되고 말 것이다.¹⁷ 제도로부터 파생된 위기를 제도에 의거해 해결하려는 논법이 갖는 가장 큰 함정이 거기에 있다.

현재 한국에서 문화연구의 또 다른 한 축을 만들어가는 문화사적 흐름을 거론할 때 이러한 문제의식은 더욱 선명히 부각된다. 국문학계가 주도하는 이 흐름은 십여 년 전에는 ‘풍속사,’ ‘문화사,’ ‘문화론적 연구,’ ‘문화연구’ 등 다양한 이름으로 호칭되며 명확한 정체성을 갖지 못했으나, 근래에

15. 인문학의 위기에 대응한 세 입장들을 ‘줄 세울’ 이유는 없으나, 마지막 사례가 가장 문제적이었음은 두루 공감할 것이다. 행정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집행된 인문학 또는 대중문화사업은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관료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16. 극단적으로 말해 아무리 국가가 문화에 대해 진취적이고 순수한 자율적 태도를 취한다 해도, 국가라는 제도와의 관계 속에서 문화는 억압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다. ‘문화경제’와 마찬가지로 ‘문화국가’ 역시 본질적으로는 자본과 국가라는 두 기축 자체에 대한 비판을 허용하지 않는 까닭이다. 그 한 가지 사례로 마르크 퀴마롤리(Marc Fumaroli), 『문화국가. 문화라는 현대의 종교에 관하여』, 박형섭 옮김, 부산: 정성대출판부, 2004 참조.

17. 1990년대 후반 들뢰즈 등에 의해 도입된 자유로운 탈주운동으로서 ‘노마드’의 개념이 기업의 상품이미지로 전락하여 소비주의의 세련된 수사로 전용된 경우를 보라(최진석 외, 『불온한 인문학』 64-65).

이르러 ‘문화사 연구’ 혹은 ‘문화(론)연구’로 정리되는 추세이고, 이로써 사회과학적 문화연구와 비등한 인문학적 문화연구의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천정환, 『‘문화론적 연구’의』 11-48). 앞서 서술했던 제도적 경계를 벗어나는 인문학이 대중인문학에 비중을 두는 반면, 이 흐름은 보다 전문적인 영역을 파고드는데 근대성을 주체화한 한국 현대문화사 다시 읽기/쓰기가 그것이다(장석만 외 24-30). 주로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고 있지만, 그중 일부는 대중잡지에 연재되어 책으로 묶여 나오거나 학술논문으로 집필되었다가 평이한 스타일로 재편되어 출간되기도 했는데, 그 점에서 학문적 깊이와 대중적 폭을 골고루 갖춘다는 중평을 받는다.¹⁸ 인문학적 기반을 둔 문화사와 문화론적 연구는 문화연구의 영역에서 사회과학적 기반 연구보다 더 일반화되어 있는데, 이는 그것이 전통적 인문학의 서사와 많은 점에서 교차하고 상보적 관계를 이루고 있기에 대중과 더 손쉬운 접점을 찾아냈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사와 문화론적 연구의 가장 큰 난점은 그것이 학계와 긴밀한 관계 속에 있기에 어쩔 수 없이 제도적 의존과 강박이 크다는 것이다. 대학교수로 고정된 일자리를 확보하지 못한 연구자들이 고문헌들을 수합하고 분석하며 성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안정된 봉급과 보험혜택 등을 필요로 하는데, 현재 한국의 대학사회에서 이를 충족시켜주는 조건은 한국연구재단과의 관계에 귀속되는 게 유일한 탓이다. 이른바 BK(Brain Korea)·HK(Humanities Korea)·SSK(Social Science Korea) 등의 사업명으로 호칭되는 이러한 귀속성은 국가제도에 대한 불가피한 의존적 태도로 이어지고 연구자가 소위 ‘을’의 위치에서 자신의 과제를 수행하게끔 강압한다. 최악의 경우 ‘논문기계’라 불리는 아무 쓸모없는 글쓰기 회로에 갇혀 폐지 같은 논문을 양산해 내고, 최선의 경우라 해도 소수 연구자에게만 접근 가능

18. 예컨대 다음의 자료 참조. 천정환, 『자살론』, 서울: 문학동네, 2013; 권보드래, 천정환, 『1960년을 묻다-박정희 시대의 문화정치와 지성』, 서울: 천년의 상상, 2012; 장세진, 『상상된 아메리카』, 서울: 푸른역사, 2012.

한 암호문 같은 글이 나오거나 또는 대중의 호사가적 욕구만 충족시키는 ‘당의정 인문학’을 낳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문화연구가 지향하였던 학제 간 연구는 공염불에 그치고, 분과학문의 엄격한 체계를 고수하는 역효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결국 제도의 한계를 깨기 위해 시도된 다양한 시도가 제도의 지원이라는 초기 조건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다시금 제도에 결박되는 사태가 벌어지는 것이다(박헌호 182). 재경계화와 탈경계화 사이의 막대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제도 너머를 바라보는 내과의 지점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까?

IV. 나가며: 내과와 탈경계화

문화연구는 사회적 현실에서 존속하고 작동하기에 ‘대결’이든 ‘타협’이든 제도와 상관적으로 기능하는 담론장치이지 않을 수 없다. 국가에 대한 비판적 대결이라 할지라도 거기엔 일정 정도 국가와의 관계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다. 가령 문화연구가 대학원 형태로서 대학이라는 제도 내에 설치되어 있다든지, 기성의 논문적 양식과는 구별되는 자유로운 글쓰기를 지향한다 해도 여전히 담론의 형식을 고수한다든지, 또는 연구자가 문화연구(문화학)를 전공으로 삼지 않는다 해도 대학의 학위수여제도에 의지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한다는 점을 떠올려 보라. 앞서 우리가 자세히 돌아보았던 서구와 한국의 문화연구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제도에 갇히지 말 것을, 제도 내부에서나 제도를 통해서 위기를 타개하려는 시도는 절망적이란 사실을 일깨우지만, 그렇다고 온전히 제도 바깥에서 ‘자유롭고’ ‘순수한’ 저항을 회구하려는 태도 역시 몽상에 가깝다는 점을 보여준다. 문화연구가 직면한 위기를 깨뜨리고 나아가는 길은 제도 밖으로 ‘탈주’라는 이상에 의존해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들뢰즈와 가타리가 지적하듯 재영토화에 대한 예견 없이 탈영토화는 실행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재영토화(재경계화) 속에서 탈영토화(탈경계화)를 지속하도록 만드는 동력, 그 운

동의 첨점(尖點)을 어떻게 찾고 확보할 것인가?

1990년대 한국에 문화연구가 소개되고 가동된 이래, 지금 그것의 주제와 관점, 방법론은 폭넓은 공유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아직 소수이긴 하지만 대학원의 학제로서 자리를 잡는 한편으로, 언론학과 인문학의 몇몇 분과는 문화연구를 자기 학문의 자의식으로 받아들이는 형편이다. 애초에 문화연구가 자신의 존립근거를 내세우거나 정체성 형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이유가 근대적 제도로서 대학의 분과학문에 반대했던 것이었기에, 필자는 이런 현상이 긍정적인 측면을 갖는다고 판단한다. 문화연구의 탈경계적 운동이 분과적 경계 ‘너머’로 이월하고 전이되어 새로운 경계화를 야기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도적 경계 내부의 순치가 아니라 외부로의 이행을 통해 문화연구는 그 현실성을 발휘하는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문화연구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정의할 수 있기보다, 문화연구가 갖는 효과로서 탈경계화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문화연구라 명명할 수 있는 의제적 성격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문화연구는 특정하게 규정된 요소들을 확인해 정체를 검증할 수 있는 내적 경계를 소유한 게 아니라 특정한 방식의 운동성을 통해 단지 명명할 수 있을 뿐이다. 물론 그 운동은 탈경계화에 다름 아니다. 요컨대 문화연구는 의제가 있어서 문화연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탈경계화를 의제화할 수 있다면 그것이 문화연구가 되는 것이다.

관건은 무슨 거창한 목표를 설정하여 문화연구라는 레테르를 붙이는 게 아니라 탈경계화라는 운동 자체에 충실하기에 있다. 그것은 탈경계화의 주체 자신에게도 예외 없이 가동되는 운동이 되어야 한다. 자기비판을 포함한 모든 것에 대한 비판적 관점의 유지야말로 문화연구를 규정짓는 의제화가 될 수 있는 까닭이다(김현미 외 48). 주어진 현실에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탈경계의 물꼬를 찾아나서는 것, 그것은 일종의 우울증적 주체의 형상일 것이다. 어떤 탈경계화에도 만족할 수 없이 새로운 탈경계의 계기를 찾아나서는 것, 실정적인 목적을 내세우고 완수하는 대신 현존하는

모든 경계선들에 부단한 부정성의 균열을 도입하는 것이 탈경계화의 목적이 아닐까(김홍중 98-99)? 궁극적으로 탈경계화가 정치화의 한 형태가 되는 것은 그런 까닭이 아닐까(최진석, 「탈경계와」 52)?

내파는 탈경계화를 가동시킬 때 그것이 제도 내부를 맴도는 재경계화의 회로에 갇히지 않도록, 또는 반대로 온전히 제도의 외부에서 내부를 넘겨보는 시선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다. 즉 내파는 안에서 밖을 치거나 밖에서 안을 치는 일방성에 함몰되지 않기 위한 전략으로 기능하며, 구체적으로 그것은 내재하는 외부로서 문화연구의 위상학적 자리가 어디가 되어야 할지를 지정해 준다. 우리가 제도를 문제 삼을 때 제도 ‘안’이나 ‘밖’이냐의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형식적 거점이 바로 내재하는 외부라는 지점이다. 서구에서든 한국에서든 문화연구가 제도에 종속되거나 무력화되었을 때, 그것은 대개 내재하는 외부와 같은 역설적이지만 실제적인 내파의 자리를 상실한 시점이었다. 내파를 가동시킴으로써 제도 너머를 향한 파열을 이끌어내는 지점인 내재하는 외부를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내재하는 외부라는 다소 역설적인 표현에 대한 오해를 피해야 한다. 그것은 실제적인 어떤 규정된 지점이라기보다 위상학적 자리로서, 전략적으로 변경 가능한 위치를 가리킨다. 쉽게 말해, 내재하는 외부는 문화연구의 비판성에 충실한 행위, 탈경계화라는 운동에 충실한 수행성에 의해 규정되는 자리다. 우리는 기본적인 존립을 위해 제도의 도움을 받다가 끝내 제도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지, 제도적 경계에 대한 비판보다는 그것의 유지와 보존에 역으로 끌려들어가는 사례를 수없이 목격해왔다. 90년대에 인문학의 위기가 닥친 후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비제도권 인문학 단체는 자립성의 벽을 넘지 못해 제도에 손을 벌린 다음, 자연스럽게 그 힘을 소진시키고 사라진 사실들을 알고 있다. 내재하는 외부를 비판적 문화연구의 거점으로 지목하는 것은 제도를 전적으로 부인하라거나 제도와 충분히 타협하라는 의미가 아니다. 아니, 역으로 그 둘 다를 지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내파의 전략이란 문화연구가 갖는 비판에 충실한 수행적 행위에서 비롯된다. 설령 그것이 제도의 지원을 받는다 해도 탈경계화라는 급진적인 운동성을 포기하지 않고 수행할 때 내파는 실효적이 된다. 내재하는 외부의 자리란 이러한 내파가 실현될 수 있는 문화연구의 위치에 다름 아니다. 들뢰즈라면 ‘매저키즘적’이라 불렀을 이러한 전략이야말로 문화연구의 현재성을 언급할 수 있게 해주는 유력한 주제이자 관점, 방법론이 아닐까 싶다. 제도(법)이 설정한 경계를 완파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은 그것에 복종하는 듯하면서 동시에 내부로부터 파열지대를 열어젖히는 것이기 때문이다(Deleuze 81-90). 그렇다면 문화연구는 그것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어떤 것을 하는가에 의해서만 지칭될 수 있는, 단지 ‘도래할’ 학문이라 부를 수 있을 뿐이다.

Works Cited

- Brantlinger, Patrick [브랜틀링거, 패트릭]. *Yeongmi Munhwayeongu* [Crusoe's Footprints: Cultural Studies in Britain and America, 영미 문화연구]. Trans. Kim Young-Gyu et al. [김용규 외 옮김]. Seoul [서울: Munhwagwahaksa [문화과학사], 2000. Print.
- Buck-Morss, Susan [백-모스, 수잔]. *Kkumui Segyewa Paguk* [Dreamworld and Catastrophe, 꿈의 세계와 파국]. Trans. Yoon Il-Sung et al. [윤일성 외 옮김]. Busan [부산: Kyungsung UP [경성대학교출판부], 2008. Print.
- Cheon, Jung-Hwan [천정환]. “Munhwaronjeok Yeongu’ui Hyeonsil Insikgwa Jeonmang” [Recognition and Perspective of the ‘Cultural Studies,’ ‘문화론적 연구’의 현실 인식과 전망]. *Sangheohakbo* [The Journal of Korean Literature, 상허학보] 19 (2007): 11–48. Print.
- _____. *Jasallon* [On Suicide, 자살론]. Paju [파주: Munhakdongne [문학동네], 2013. Print.
- Choi, Jang Jip [최장집]. *Minjuhwa Ihueui Minjujueui* [Democracy After Democratization,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Seoul [서울: Humanitas [휴머니타스], 2010. Print.
- Choi, Jin Seok [최진석]. “Talgyunggyewa Ihaengeui Munhwajeongchihak” [Transgression and Transition in Cultural Politics, 탈경계와 이행의 문화정치학]. *Bigyomunhwayeongu* [Cross-Cultural Studies, 비교문화연구] 35 (2014): 35–58. Print.
- Choi, Jin Seok, et al. [최진석 외]. *Bulonhan Inmunhak* [Rebellious Humanities, 불온한 인문학]. Seoul [서울: Humanist [휴머니스트], 2011. Print.
- Chow, Rey [초우, 레이]. *Diasporaui Jisikin* [Writing Diaspora, 디아스포라의 지식인]. Trans. Jang Soo-Hyun et al. [장수현 외 옮김]. Seoul [서울: Yisan [이산], 2005. Print.
- Deleuze, Gilles. *Masochism*. New York: Zone Books, 1991. Print.
- Eagleton, Terry [이글턴, 테리]. *Munhakironipmun* [Literary Theory: An Introduction, 문학이론입문]. Trans. Kim Myung-Hwan [김명환 옮김]. Paju [파주: Changbi [창작과비평사], 1993. Print.
- Easthope, Anthony [이스트훅, 앤서니]. *Munhakeseo Munhwayeonguro* [Literary into Cultural Studies, 문학에서 문화연구로]. Trans. Lim Sang-Hoon [임상훈 옮김]. Seoul [서울: Hyundaemihaksa [Modern

- Aesthetics Publishing, 현대미술사], 1994. Print.
- Foucault, Michel [푸코, 미셸]. *Malgwa Samul* [Les Mots et Les Choses, 말과 사물]. Trans. Lee Kue-Hyun [이규현 옮김]. Seoul [서울]: Mineumsa [민음사], 2012. Print.
- Fumaroli, Marc [뤼마롤리, 마르크]. *Munhwagukga* [L'Etat Culturell, 문화국가]. Trans. Park Hyung-Sup [박형섭 옮김]. Busan [부산]: Kyungsung UP [경성대학교출판부], 2004. Print.
- Grossberg, Lawrence [그로스버그, 로렌스]. “Munhwayeongu: Gihoikeui Yeoksa, Geu Guseongcheui Sidae” [Cultural Studies: History of Projects, Times of their Communities, 문화연구: 기획의 역사, 그 구성체의 시대]. Trans. Park Ji-Young [박지영 옮김]. *Eonronjungboyeongu* [Journal of Communication Research, 언론정보연구] 42.1 (2005):127–66. Print.
- Ha, Yoon Keum [하운금]. “Munwhayeongueui Paereodaim Wigi” [Crises of Paradigm in Cultural Studies, 문화연구의 패러다임 위기]. *Jinbopyungron* [Progressive Review, 진보평론] 14 (2002): 11–33. Print.
- Hall, Stuart [홀, 스튜어트]. “The ‘First’ New Left: Life and Times.” *Out of Apathy: Voices of the New Left Thirty Years On*. Ed. Robin Archer et al. London: Verso, 1989. 11–38. Print.
- . “Cultural Studies and Its Theoretical Legacies.” *Cultural Studies*. Ed. Lawrence Grossberg et al.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2. 277–94. Print.
- . “Ideologieui Munje” [Problems of Ideology, 이데올로기의 문제]. *Stuart Halleui Munhwairon* [Cultural Theories of Stuart Hall,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Trans. Lim Young-Ho [임영호 옮김]. Seoul [서울]: Hannarae [한나래], 2008. 29–59. Print.
- . “Munhwayeongueui Du Gaji Paereodaim” [Two Paradigms of Cultural Studies, 문화연구의 두 가지 패러다임]. *Stuart Halleui Munhwairon* [Cultural Theories of Stuart Hall, 스튜어트 홀의 문화이론]. Trans. Lim Young-Ho [임영호 옮김]. Seoul [서울]: Hannarae [한나래], 2008. 203–32. Print.
- Hughes, Stuart [휴, 스튜어트]. *Usikgwa Sahoe* [Consciousness and Society, 의식과 사회]. Trans. Hwang Moon-Soo [황문수 옮김]. Seoul [서울]: Kaemagowon [개마고원], 2007. Print.
- Jang, Seok-Man, et al. [장석만 외]. *Hanguk Geundaeseong Yeonguui Gireul*

- Mutda* [Asking About the Studies of Korean Modernity, 한국 근대성 연구의 길을 묻다]. Seoul [서울: Dolbege [돌베개], 2006. Print.
- Jang, Se-Jin [장세진]. *Sangsangdoen Amerika* [Imagined America, 상상된 아메리카]. Seoul [서울: Pureunyeoksa [푸른역사], 2012. Print.
- Kang, Nae-Hui [강내희]. “Munhwayeonguwa ‘Sae Inmunhak’” [Cultural Studies and ‘New’ Humanities, 문화연구와 ‘새 인문학’]. *Soganginmunnonchong* [Humanities Journal, 서강인문논총]. 18 (2004): 1–30. Print.
- . “Gangnaehuiwauui Inteobyu” [Interview with Kang Nae Hui, 강내희와의 인터뷰]. *Hanguk Inmunhak Jigakbyeondong* [Crustal Movements in Korean Humanities, 한국 인문학 지각변동]. Ed. Kim Hang et al. [김항 외 엮음]. Seoul [서울: Greenbee [그린비], 2011. 164–85. Print.
- Kim, Chang-Nam [김창남]. *Daejungmunhwaewui Ihae* [Understanding the Popular Culture, 대중문화의 이해]. Seoul [서울: Haneul [한울], 2010. Print.
- Kim, Hong-Jung [김홍중]. *Maeumeui Sabuoihak* [Sociology of Mind, 마음의 사회학]. Paju [파주: Munhakdongne [문학동네], 2009. Print.
- Kim, Hyun Mi, et al. [김현미 외]. “Hanguk Munhwayeongu 10neoneui Yusangwa Gwaje” [10 Years of Korean Cultural Studies. Their Legacy and Tasks, 한국 문화연구 10년의 유산과 과제]. *Munhwasahuoi* [Cultural Society, 문화사회] 1 (2005): 13–50. Print.
- Kim, Won [김원]. “Minjok-Minjungjeok Hakmungongdongcheeui Byunhwawa Daeanjeok Jisikgongdongche” [Changes of National-Popular Academic Communities and Alternative Knowledge Communities, 민족·민중적 학문공동체의 변화와 대안적 지식공동체]. *Jisikeui Hyunjang*. *Damronneui Punggyeong* [Fields of Knowledge. Scene of Discourse, 지식의 현장. 담론의 풍경]. Trans. Kwon Boe-Due-Rae et al. [권보드래 외 옮김]. Seoul [서울: Hangilsa [한길사], 2012. 75–136. Print.
- Kim, Yong-Kue [김용규]. *Munhakeseo Munhwaro* [From Literature to Culture, 문학에서 문화로]. Seoul [서울: Somyungchulpan [소명출판], 2004. Print.
- Kristeller, Paul [크리스텔러, 폴]. *Renesanseui Sasanggwa Geu Woncheon* [Renaissance Thought and Its Sources, 르네상스의 사상과 그 원천]. Trans. Jin Won-Sook [진원숙 옮김]. Daegu [대구: Kyumyung UP [계명대학교출판부], 1995. Print.

- Kwon, Boe-Due-Rae, and Jung Hwan Cheon [권보드래 & 천정환]. *1960Onyeoneul Mudda* [Asking about 1960s, 1960년을 묻다]. Seoul [서울]: Ceonneoneui Sangsang [천년의 상상], 2012. Print.
- Laclau, Ernesto, and Chantal Mouffe [라클라우, 에르네스토 & 샬탈 무페]. *Hegemoniwa Sahuoijueui Jeonryak* [Hegemony and Socialist Strategy, 헤게모니와 사회주의 전략]. Trans. Lee Seung-Won [이승원 옮김]. Seoul [서울]: Humanitas [휴머니타스], 2012. Print.
- Lee, Dong Yeon [이동연]. *Munwhayeongueui Saeroun Topicdeul* [New Topics of Cultural Studies, 문화연구의 새로운 토픽들]. Seoul [서울]: Munhwagwahaksa [Cultural Science Publishing, 문화과학사], 1997. Print.
- . “Munhwa/gwahakeui Ironjeok Silcheongwa Munhwaundongueui Gwejeokdeul” [Theoretical Practices of Culture/Science and Trajectories of Cultural Movements, 문화/과학의 이론적 실천과 문화운동의 궤적들]. *Munhwa/gwahak* [Culture/Science, 문화/과학] 70 (2012b): 148–79. Print.
- Lee, Sang Gil [이상길]. “Munhwayeongueui Aporia” [Aporia of Cultural Studies, 문화연구의 아포리아]. *Hangukeonronhakbo*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한국언론학보] 48.5 (2004): 79–110. Print.
- . “Munhwayeongueui Yeongumunhwa” [Research Culture of Cultural Studies, 문화연구의 연구문화]. *Minjokmunhwayeongu* [Korean Classics Studies, 민족문화연구] 53 (2010): 1–63. Print.
- Lee, Sung Hoon [이성훈]. “Inmunhakeui Wigiwa Munhwayeongu” [Crises of Humanities and Cultural Studies, 인문학의 위기와 문화연구]. *Inmunhaknonchong* [Kyungseung Humanities Studies, 인문학논총] 7 (2003): 109–30. Print.
- Lim, Young Ho [임영호]. “Stuart Hallgwa Munhwayeongueui Jeongchi” [Stuart Hall and the Politics of Cultural Studies, 스튜어트 홀과 문화연구의 정치]. *Munhwa/Gwahak* [Culture/Science, 문화/과학] 78 (2014): 253–72. Print.
- Lyotard, Jean-Francois [리오타르, 장-프랑수아]. *Poseuteumodeonui Jogeon* [Postmodern Conditions, 포스트모던의 조건]. Trans. Yoo Jung-Wan [유정완 옮김]. Seoul [서울]: Mineumsa [민음사], 1992. Print.
- Maxwell, Richard. “Why Culture Works?” *Culture Works: The Political Economy of Culture*. Minneapolis, MN: U of Minnesota P, 2003.

- 1-21. Print.
- McRobbie, Angela. "Post-Marxism and Cultural Studies: A Post-script." *Cultural Studies*. Ed. Lawrence Grossberg et al. New York and London: Routledge, 1992. 719-30. Print.
- Munhwagwahak Pyeonjipwiwon [Editor of *Cultural Science*, 『문화과학』 편집위원]. "Munhwagwahakeul Changganhamyeo" [Publishing *Cultural Science*, 『문화 과학』을 창간하며]. *Munhwagwahak* [Cultural Science, 문화과학] 1 (1992): 2-5. Print.
- Park, Hun-Ho [박헌호]. "'Munhwayeongu'eui Jeongchiseonggwa Yeoksaseong'" [Politicity and Historicity of 'Cultural Studies,' '문화연구'의 정치성과 역사성]. *Minjokmunhwayeongu* [Korean Classics Studies, 민족문화연구] 53 (2010): 157-88. Print.
- Procter, James [프록터, 제임스]. *Jigum Stuart Hall* [Stuart Hall, 지금 스튜어트 홀]. Trans. Son Yoo-Kyung [손유경 옮김]. Seoul [서울: Aelpi [엘피], 2006. Print.
- Seo, Dong Jin [서동진]. "Simmijeokin, Neomuna Simmijeokin Jabonjueui" [Aesthetic, Too Aesthetic Capitalism, 심미적인, 너무나 심미적인 자본주의]. *Gyungjewasahoe* [Economy and Society, 경제와 사회] 92 (2011): 10-41. Print.
- Shim, Kwang Hyun [심광현]. "Munhwa/Gwahak 20nyeoni Ironjeok Gwejeoge daehan Bipanjeok Hoego" [Critical Retrospection on the 20 Years of the Theoretical Trajectories of *Culture/Science*, 『문화/과학』 20년의 이론적 궤적에 대한 비판적 회고]. *Munhwa/Gwahak* [Culture/Science, 문화/과학] 70 (2012): 17-47. Print.

Abstract

Transgredient Problematics of ‘Cultural Studies’ and Their Actuality

Jin Seok CHOI (Ewha Womans University)

This article aims to trace a history of the “cultural studies” from their emergence to the present in both Korea and the UK. There have been some fundamental problems concern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cultural studies in the modern academicism, because the autonomy of the science, independent of official institutions (statism and capitalism) was counted as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foundation of modern science. As a result, the individual scientific fields and their cultural areas were established in academic systems as institutions. However, the scientific-cultural boundaries paradoxically made mutual communication between them impossible and caused a serious subordination of sciences/culture to the institutions controlled by market-based capitalism and bureaucratic statism. This is the sociocultural background for the emergence of cultural studies in the 1960s. From their beginning, they have aspired toward transgredient problematics for practical solutions in modern society. In this regard, firstly, I tried to survey historical trajectories of the cultural studies from a transgredient point of view and pose several questions about their realistic strategies and so on. Under present conditions, strategic actualities of cultural studies consist in occupying the position of “exteriority within interiority.” I think we had better adopt the strategy of “implosion” by Jean Baudrillard for breaking through the boundaries between restricted cultural areas. Transgredience in cultural studies must be regarded as some sort of “de-territorialization” as with Deleuze and Guattari, because this concept-movement is not a temporary measure for the crises in modern academicism. That’s why we have surveyed the historical trajectories of cultural studies from their subversive point of view.

Keywords: Cultural Studies, Transgredience, Institutionalization, Implosion, Exteriority within Interiority

Jin Seok CHOI is HK(Humanities Korea) research professor in the Ewha Institute for the Humanit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He received a Ph.D. in cultural studies from the Russian State University for the Humanities in Moscow. His main research interests are cultural theory and practice, intellectual history, and literary criticism. His recent articles are “Cultural Politics of Transgredience and Transition” and “Radishchev and the Problems of the Russian Intellectual History in the 18th Century.” He translated Gregg Lambert’s *Who is afraid of Deleuze and Guattari?* (2013) and Mikhail Ryklin’s *Deconstruction and Destruction* (2009) into Korean.
vizario@ewha.ac.kr

Received: 11 May 2015 Reviewed: 19 May 2015 Accepted: 22 May 2015